

[기자회견문]

‘전력수급 정치화하는 전력위기설 중단 촉구’

<국회의원 양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편승해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이 탈원전정책 공격용으로 전력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보기보다 전력수급을 정치화해 전력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 전력 수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력 수급현황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올 여름 들어 최대전력수요(91.1기가와트, GW)를 보인 어제(27일) 전력 예비율은 11%로 원전 9기 분량 이상인 9.6기가와트가 예비전력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7월 4주차 전력 예비율은 4.2%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지만 4주차인 현재 전력예비율은 10% 선으로 당초 전망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계량기 뒤편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전환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수요자원시장(DR)과 태양광 연계 배터리(ESS) 등 추가로 약 8.8기가와트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력수급은 예년보다도 더 안정적입니다.

전력위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합니다만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만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전력수급 정보 발령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전력 예비력은 5.5기가와트입니다.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전망치인 94.4기가와트에 적용해 예비율로 환산하면 5.8%선입니다. 10% 전력 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력대란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탈원전정책은 2080년까지 60년에 걸쳐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가그룹이 전력 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진행하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을 전력공급난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건설 중인 원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약 0.7기가와트 용량의 월성1호기가 폐쇄되었어도, 1.4기가와트 용량의 신고리4호기가 가동되고 신한울1호기의 운영이 허가되어 원전 기수와 총 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 등이 퍼뜨리고 있는 전력위기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성하여 원전정책을 고수하려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아닌 악의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이 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잘 이용하고 보전·관리해 미래 세대에 건강하게 넘겨줘야 하는 모든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원전사고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전사고는 인류뿐만 아니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원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전력 수급 현황은 비계량 태양광발전의 활성화가 가장 수요가 많은 오후 2~3시 시간대의 수요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와 에너지믹스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실현하며 탈원전정책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수진(비례)